

이재정 “과대·과밀학급 해소 가장 시급”

(경기도교육감)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현황 파악·적용 기준 개선 등 논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대·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에 있으며, 이 토론회가 하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과 국회교육문화포럼은 29일 과대·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문화포럼(대표의원 안민석, 최강욱)과 함께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대·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학기 전면등교로 학내 거리두기 필요성이 높아지고, 신도시 중심으로 과대·과밀학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과대·과밀학급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안민석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좌장을 맡았

다. 이재정 교육감은 “토론회에서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문제를 집중 토론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과 학교의 문제도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감축하는 구조의 교육학적 해석과 교육 효과 등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대·과밀학급 현황 ▲과대·과밀학급 관련 주요 사례(경기도) ▲과대·과밀학급에 따른 문제점 ▲과대·과밀학급 적용 기준 개선 필요성 ▲교원 확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토론회 영상은 도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경기도교육청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수원시의회, ‘독립청사’ 첫 삽... 2년 후 더부살이 벗어나

열린 시정 위해 시민 공간 마련
조석환 의장 “시 랜드마크 기대”

수원시는 수원시의회를 탈바꿈하기 위한 독립청사 공사에 착수해 29일 인계동 청사 건립부지(팔달구 효원로235번길 13) 내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수원시의회 청사 기공식에서 염태영 시장, 조석환 의장 등이 참석해 시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병석 기자

이날 기공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는 2023년 10월 완공예정인 수원시의회 청사는 연면적 1만2539.93㎡, 지하3층·지상9층 규모로 건립된다. 본회의장과 세미나실, 다목적라운지, 휴게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독립청사 없이 수원 시청 본관 3~4층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의회 독립청사가 없는 도시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아직도 수원시의회는 시청건물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원한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시장은 “전국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의회청사가 단독으로 없는 곳은 수원시 밖에 없다. 수원시의 예산을 수원 시민을 위해 투자하는 것에 양해하고 인내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수원시의회·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시의회에는 최고의 의정공간, 시민들에게는 열린 시정 참여 공간이자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되도록 청사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의 중심에서 만나는 특별한 공간.

남산서울타워 전광판 광고

- 글로벌 랜드마크
- 방문객 연 1200만명
- 외국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소
-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름철 관광지

문의 031) 268-8330

단비 같지만 학부모 애태운 교육회복지원금



기자의 창(窓)

신연경 사회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5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교육회복지원금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시행된 지 보름동안 신청 오류 등 혼선을 빚으며 학부모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834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도내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및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은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학부모들은 지원금으로 책과 교재 구입에 보태거나 학원비, 외식비 등 유용하게 썼다고 반색했다. 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반면 사업 시행 보름간 ‘다져녀 가정의 중복 오류’,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크고 작은 혼선도 있었다.

학부모들은 “1차 신청 이후 지역화폐 앱을 통해 2차 신청 시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 오류문의를 해도 전화 연결도 안되고 알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도내 지자체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걸어보니 ‘통화

중이므로 연결이 어렵다’는 멘트만 슬하게 들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학생과 달리 학부모의 데이터는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 정보불일치나 누락 등의 오류는 수정·보완 중이며, 점검을 거쳐 지원 절차를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학생 166만 명을 대상으로 한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들도 최선을 다해 문의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신청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만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교육회복지원금 오류는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위원회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배수문(더민주·과천) 의원은 “이런 오류가 한 번 뜨면 사실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뭐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중간 전달 단계에서 오류가 된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학생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에 맞는 단비 같은 교육회복지원금이지만, 한편으로는 ‘나만 못 받은 거 아닌가’하고 학부모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경기도교육청의 3차 추가경정예산에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도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큰 규모의 사업에 맞게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방대본, 수도권 코로나 위험도 ‘매우 높음’

추가적 일상화 단계 이행 불가능

정부가 지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전국 단위에서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9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지역별로 수도권은 ‘매우 높음’이고, 비수도권은 ‘중간’이라고 진단했다.

방대본은 직전주인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위험도를 ‘높음’으로 평가했는데 한주 만에 1단계 상향되면서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

단계에 도달했다.

방대본은 “국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으로, 추가적인 일상화 단계 이행은 불가능하다”며 “악화되는 추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강화대책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방대본은 코로나19 위험도를 3개 영역에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주간 위중증 환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등 17개 평가 지표로 나누어 매우 낮음·낮음·중간·높음·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한솔 기자